

오피니언

특/별/기/고

김 봉 중



역사는 상징이다. 우리 시대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는 더욱 뚜렷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과거의 특정한 시대에 어떤 특정한 인물 혹은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더듬어가고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백 년이 지난 후 후손들이 우리 시대를 기억할 때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할까?

상징은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라는 얘기다. DJ를 떠나보내며 우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칭송한다.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으로 송찬했다. 그러나 먼 미래에도 DJ가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사도(使徒)로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인물일지 자신

있는가?

역사적 상징성은 미래 역사의 몫이다. DJ의 역사적 가치는 향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과 그것이 세계 민주주의에

차지하는 가치에 달려있다.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력의 신장에 달려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영웅으로 탄생하기까지는 그가 암살당한 이후 미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력의 신장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은 남북전쟁 후 지역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연방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토대로 통합되었고 국력은 일취월장했다.

하지만 링컨은 만들어진 영웅이다. 링컨의 행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허구라

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대에는 링컨이 영웅으로 추앙받기란 쉽지 않았다. 그 당시 정치는 이른바 ‘파격과 공화당’이 장악했고 그들은 링컨의 남북 화해 정책을 방해했다. 링컨은 오랜 세월 동안 남부에선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링컨은 미국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어졌다. 링컨을 미국 최고의 영웅으로 선택하고 만들었던 미국인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링컨은 미국 연방을 지켰고 노예를 해방시켰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의 자유와 평등의 기초를 지키고 구체화 시

켰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국력은 놀라운 정도로 빨리 성장했고, 이윽고 세계질서를 주도했다. 세계적인 국가는 그 위상에 맞는 영웅이 필요하다. ‘건국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고 3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제퍼슨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미국의 건국기념으로 받들었던 자유와 평등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은 뭔가 부족분했다. 링컨이야말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건국 초

기부터 남북전쟁까지의 미국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대내외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대표할 인물로서 링컨은 최적이었다.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정치제도이자 사상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국력이 세계를 주도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과 세계인들이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대한 미국의 상징적 인물로 생각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DJ를 코리아의 영웅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회의적으로 보느냐, 세계 속의 우리의 위상에 대해 확신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지역과 당, 그리고 개인적 호불 관계를 떠나 미국인들이 링컨을 추앙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DJ를 추앙해야 한다. 미래는 우리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DJ의 시대, 이제 막 시작이다. <전남대 교수·미국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이 어제 엄수됐다. 시대의 격랑을 온몸으로 헤치며 민주와 인권, 남북 화해를 열망했던 고인은 서울 동작동 현충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혔다.

그러나 고인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꿈과 철학, 희망은 함께 묻히지 않았다. 민주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정치 보복이 없는 화해와 관용의 사회,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의 모든 지역과 계층이 풀고루 잘사는 세상, 사회의 낮은 곳과 억울하고 한 맺힌 사람들을 향한 깊은 애정, 민주화 투사 일 때도, 아담 대표일 때도,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고인이 변함없이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꿈과 희망이다.

고인의 고귀한 꿈과 희망은 우리의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절실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깊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추모객들로 넘쳐났다. 여도 아도, 좌도 우도, 고인의 송고한 이념을 기리며 서거를 애도했다. 노선과 이념을 달리했던 정치적 경쟁자도, 군사정권 시절의 박해자도, 햇볕 정책을 폈었던 현직 대통령도 한마음으로 고인을 애도했다. 극한 대립으로 일관했던 정치권도 정쟁을 덮고 추모 대열에 합류했다. 사회 전체가 모처럼 한 마음으로 고인의 뜻을 되새긴 것이다. 고위급 복측 조문 사절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경색됐던 남북 관계 역시 화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헛되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의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다. 이런 추모와 애도의 열기 속에는 민주발전, 경제번영, 국민 화합, 남북화해 등 고인이 평생 추구해온 꿈과 희망의 실현에 대한 바람이 짙게 녹아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인

의 꿈과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사회와 국민에 대한 고인의 깊은 애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난 21일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말기는 모두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삶을 대하는 경건한 자세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은 읽는 이의 옷깃을 여미게 했고, 정부를 향한 비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겨레에 대한 걱정의 짐을 내려놓지 않은 나라 사랑 그 자체였다. 민주주의 후회와 남북관계 위기 등에 대한 고인의 비판은 진정성이 들어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좌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저 배어 있다.

고인이 평생 동안 실천해 온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일은 이제 살아 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책 기초가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인이 강조해 왔던 관용과 화해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세로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지난 시대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말로 진정한 중도실용의 자세다. 많은 국민들은 고인의 충고와 지적이 여권의 근본적 태도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

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가 나라와 겨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떠나 온 국민이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며

미국-아 인권' 남북 화해의 의미' 매니지먼트' 양었다

無 等 鼓

그가 떠났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뒤로 한 채, 우리 사회에 화해와 용서, 통합의 메시지를 남기고 23일 서울현충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국회 앞 영결식장은 물론 광주·전남 50여 곳의 분향소에서는 수십만 명의 추도 인파가 운집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움 속에 지켜봤다.

평생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민족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대사의 거목이었다.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다. 알궤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도 ‘그의 업적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사람들은 그를 ‘인동초’(忍冬草)라고 불렀다. 솔한 투옥과 망명, 연금 등 박해와 시련에 굴하지 않고 민주화의 꽃을 피워낸 인생역정이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인동초와 꼭 닮았기 때문이다. 그가 꿈꾼 세상은 지역과 계층, 이념과 세대 차이를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대통세상이었다. 그 가운데 남북화해는 평생 숙원이었다. 1971년 대선에서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4대국 안전보장론, 평화통일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 ‘색깔론’ 등 온갖 음해를 감수하면서

도 신념을 꺾지 않았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햇볕정책으로 남과 북의 마음을 녹여냈다. 2000년에는 평양을 방문하여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

고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냉전과 반목으로 일관해온 남북관계에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터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초석을 놓았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남북관계를 염려했다. 그의 서거는 북측 조문단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 남북 고위급 대화, 북측 인사들의 청와대 예방으로 이어져 해빙의 ‘무대’를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 동안 급격하게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이다. 그가 남긴 귀한 유산을 물려줌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인동초의 꿈



법조 칼럼

김 춘 성



그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건설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언론사업에 뛰어들어 이탈리아 3대 민영방송사, 인터넷 미디어 그룹, 출판사, 영화사, 전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프로축구단 AC밀란 등을 소유한 이탈리아 최대 재벌총수가 됐다. 이탈리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 이야기다.

그는 이탈리아 언론을 장악한 후 지난 1994년 집권한 이래 세 번째 총리직에 올라 수많은 뇌물, 탈세 등 각종 스캔들과 불법행위, 심지어 1998년에는 사법

이지만 아직도 의제설정력에 있어서는 신문 또는 인쇄매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론형성에 있어서 의제설정 자체가 내용에 대한 논란 이전에 더 중요한 언론행위가 된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공영성에 대한 여러가지 견제수단이 담보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독과점을 해소한다나..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강한 정파성(政派性)을 갖고 있는 조·중·동이라는 신문매체가 지상파방송사를 소유하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정파성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그 정파적 목소리가 우리사회 전체를 통제하

미디어법 단상(短想)

부로부터 2년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제한다.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대리투표, 재투표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진행중이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제출된 상태에서 국회사무처는 법안을 정부에 바로 이송하여 이송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시행을 위한 각종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하니 뭔가 급해도 한참 급한 모양이다.

미디어법 개정의 가장 큰 부분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겸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자본을 투자해서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시급하다.

도대체 전국 규모의 지상파 방송국을 만들어 기존 시장에서 살아남을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또는 신문사가 뭇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몇몇 재벌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사 외에 더 있겠는가. 결국 그들에게 지상파와 보도채널을 주자는 것 아닌가.

인쇄매체에 비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

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점에서 그 심각성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보도가능 이외에는 이미 재벌과 신문의 방송진입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온갖 갈등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가능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바뀌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지상파 공영방송사, 보도전문채널의 사장 교체는 노조의 극렬한 반대와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하더니 쓸만한 시사프로그램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바야흐로 예능프로그램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패거(?)라 할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언론관련정책이 얼마나 더 노골화 할지 자못 곤경해진다.

거대자본이 탐욕과 음함한 권력화하고 권력화한 자본은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장악을 기도하게 되고, 언론과 유착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장기화를 꿈꾸며 유유히 부패하게 되는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미디어법의 국회통과를 전후한 정국을 보면서 베를루스코니의 역정(歷程)이 자꾸만 겹쳐 보여지는 것을 어찌랴. <광주지방 변호사회 변호사>

기 고

이 중 현



한 교실 학생의 20~30%는 시시때때로 야단맞을 일을 일삼는다. 주의를 주면 ‘예’하고 대답은 하지만 또 마찬가지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 간에는 그냥 눈감아 주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학부모와 부딪칠 일도 없으니 마음도 편하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교직 생활을 해야 하나 생각하니 한숨이 나온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실 풍경이다.

우리는 중용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중용은 과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절화사상으로 적함, 적절, 합당, 적당, 정당하다는 뜻으로 확장되면서 정의나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학교 교육은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므로 극단의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정책의 방향이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야 하나? 인권을 중심으로 한 평준화 교육을 해야 하나? 학교 조직의 효율성을 올리고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경험과 실사를 존중하여 경력중심으로 해야 하나? 조직을 활성화하고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능력중심으로 해야 하나?

중도와 균형 감각

도덕이 내포한 삶의 진리로 쓰고 있다. 다만, 윤리 도덕이란 말이 그렇듯이 중용도 윤리 그 자체이면서도 윤리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중용이 중간이 아니고 적중 적합한 것이라면 비굴한 것과 무모한 것이 있을 때 비굴하거나 오만하지도 않고 겸손하면 중용이 되고, 무모하거나 망용 하지 않고 용감하면 중용이 된다고 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중용이라 하면 늘 자기를 경계하여 과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철학적이고 삶의 지혜 같아서 현실에서보다 구체적인 이해하기 쉽고 현장감 있게 중용을 해석한다면 균형감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교육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보수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발전하고 싶은 진보적인 입장이 있다.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거나 쏠리면 항상 거기 에 따른 문제가 있었다. 정치에서도, 노사 현장에서도, 경제정책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극단을 취

이럴 경우에 어느 한쪽이 정답이 될 수 없다.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교육, 경력중심과 능력중심의 사이에 어울림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균형 감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균형감각하면 수평적인 입장에서 좌 우의 균형만 생각하는 데 방향에서 좌우도 되지만, 깊이에서도 깊고 낮음, 속도에서도 빠르고 느림, 방법에서도 바로감과 우회할 즉 직선이나 곡선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좌에서 우로 갔다가, 다시 우에서 좌로 오는 것처럼 형편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기회주의자라고 하지만 좌와 우의 일정한 입장에서 균형을 잡고 큰 틀에서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는 것이 중도이고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균형감각이 아닐까?

요즈음처럼 일방적인 보수 입장, 극단적인 진보의 입장보다는 중도의 균형 감각을 갖고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진보의 입장이지만 모든 국민이 안정을 바라는 보수의 입장을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더욱이 교육에서는 더 그러하다. <무등중학교 교장>

문화도시 광주 만들기 이젠 내용을 고민 할 때

요즘 신문을 읽다 보면 문화도시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광주뿐 아니라, 부산, 전주, 경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국제영화제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은 영상 문화도시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주의 경우에도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전주에서도 한옥마을을 앞세워 전통문화도시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여러 도시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문화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는 구도형 발관 문명에 발목이 잡혀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지금 시급한 것은 문화도시 광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고민이 아닐까?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이때, 계속 담보중인 광주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김태일·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다중 이용하는 음식점 완전금연 실시를

공중이용시설에 가면 흡연구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이용 시설의 경우 다르다.

항상 음식점을 이용하다 보면 저녁 무렵 술자리 모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흡연구역이 아닌 자리에서 식사와 술을 하면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종종 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이 아니라서 자리를 선택하고 식사를 하지만 오히려 흡연자들이 많아지면 참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노광용·광주시 북구 용봉동

식당 종사자에게 물어보니 손님들이 금연구역이라고 설명하게 되면 요즘 같이 어려운 경기에 영업을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설명뿐이었다.

어떤 식당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지정 구분이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 하나로 구별되고 있다. 비흡연자에게는 담배 연기 자체가 지옥이다.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만 형식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비흡연자를 위해 신경 써 주었으면 한다. <광주지방 변호사회 변호사>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6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어른매체부 2200-669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 회 1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